

#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투쟁과 강정마을 공동체의 변동\*

정영신\*\*

- I. 문제제기
- II. 국책사업과 지역화된 사회운동의 동학
- III. 일상의 중단과 투쟁공동체의 형성
- IV. 투쟁공동체의 진화와 경계의 재구성
- V. 커먼즈운동의 전개와 '커먼즈 없는 커머닝'
- VI. 일상의 회복과 공동체 재구성의 난점들
- VII. 결론을 대신하여

## 국문요약

이 글은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강정마을의 반기지운동을 두 가지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진행되었던 대규모의 국책사업들은 1990년대부터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운동에 직면했다. 그 배경에는 대도시의 과잉팽창과 혐오시설에 대한 저항, 지방의 경제적 위기와 중앙의 재정적 지원을 대가로 한 무리한 정책 강행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이러한 충돌은 한국의 여러 지역에서 군사기지의 건설을 둘러싼 사업과 투쟁들에서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투쟁과 운동을 '지역화된 사회운동'으로 규정하고,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3A2067220)

\*\*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로컬 수준에서 형성된 공동성을 바탕으로 투쟁공동체의 형성과 그 동학을 경계의 재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한다. 둘째, 마을공동체의 결속에서 커먼즈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데, 강정마을 구럼비처럼, 이것들은 투쟁의 과정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획득하며 공간을 초월한 연대망의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강정마을에서는 구럼비 발파 이후에, 커먼즈 없는 커머닝(communing without commons)의 실천이 반대운동의 가치 지향으로 자리잡았다. 즉 상징적 커먼즈로서 구럼비의 이미지와 가치를 재소환하고 그 내러티브를 재생산하는 실천을 통해 투쟁의 공동체를 확장하고 지속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투쟁공동체의 진화와 커먼즈론에 기반을 둔 사회운동 분석은 기존 사회운동이론에서 간과했던 투쟁의 공동성과 경계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화된 사회운동의 역동적 면모를 분석할 수 있게 해 준다.

주제어 : 제주 해군기지, 강정마을, 커먼즈, 커머닝, 투쟁공동체, 지킴이

## I. 문제제기

제주해군기지반대투쟁은 2016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운동 10년에도 불구하고,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되어 2016년 2월 26일에 준공식이 거행된 것이다. 같은 날, 강정마을회와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대책위(이하 강정마을대책위)는 강정마을에서 생명평화문화마을 선포식을 거행했다. 곧 이어, 3월 28일 해군은 서울지방법원에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구상권 행사로 34억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정마을회에서 가장 힘을 쏟아 온 구상권 철회 문제는 2017년 12월 12일,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청구소송을 취하하면서 일단락이 되었다. 그러나 2017년 3월 25일, 미 해군 이지스구축함인 스테텀함(USS Stethem)이 입항한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종류의 미 해군 전함이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고, 11월 22일에는 미 해군 핵추진잠수함인 미시시피함(Mississippi, SSN-782)이 입항하기에 이르렀다. 완성된 해군기지를 둘러싼 군사활동의 본격화, 여전히 분열된 마을공동체, 마을이 주도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와 제주도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개발사업 등 강정마을 평화운동은 더욱 다양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운동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전망의 제출은 시급한 문제로 보인다.

하지만 이 글이 강정마을 평화운동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나 전망의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기존 사회운동이론에서 간과되었던 몇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제주해군기지반대투쟁과 강정마을 평화운동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우선, 이 글에서는 강정마을 평화운동을 ‘지역화된 사회운동(localized social movement)’의 맥락 속에 위치 짓고자 한다. 한국 사회운동의 영역에서는 1990년대 이후 지역(local)에 기반을 두고 국가와 주민공동체가 충돌하는 형태의 ‘지역화된 사회운동’이 점점 흔한 풍경이 되어 왔다. 부안, 영덕, 화성의 매항리, 평택의 대추리·도두리, 밀양, 성주, 제주의 강정과 성산 등 여러 지역에서 국가권력 혹은 중앙정부에 의해 추진된 대형 국책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고, 국가와 주민공동체의 충돌은 대개 마을과 주민공동체의 분열과 파괴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그 파괴적 결과를 회복하는 과정은 마을과 주민들에게 온전히 내맡겨진 일이 되었다.

이 운동들은 대개 그 목적의 달성에 ‘실패’했는데, 특히 군사기지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의 경우에는 일차적인 목표의 달성이 더욱 어려웠다. 사회운동론은 그 동안 사회운동의 성공이나 실패의 기준으로 사회운동의 요구가 정책결정에 반영되어 법제화·제도화 되는지의 여부에 관심을 두어 왔고, 이를 위한 사회운동의 조직구조, 전략과 전술, 상황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요인을 밝혀려 했다.<sup>1)</sup> 다시 말해서, 운동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통해 하나의 사회운동을 분석하는 것은 성패의 ‘일반적’ 요인을 변별하고 그 요인들이 특정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가(혹은 그 반대 방향)의 문제에 집중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방식은 ‘성공’한 운동에 이론적 관심을 집중시켜 왔고, ‘실패’한 운동들에 대한 관심은 ‘성공’한 운동들을 연구하기 위한

1) 임희섭,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이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라영재·김세진, 「사회운동이 정부정책 변화에 미치는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3; 김태연,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본 ‘불법이주반대운동’의 성공요인」, 『국제정치논총』 50(5), 2010. 여기에서 ‘조직구조’와 관련한 논쟁은 관료제화되고 집중화된 조직일수록 성공의 가능성이 높은지, ‘전술’의 문제는 폭력을 동반하는 과격한 전술 혹은 평화적이고 온건한 전술이 성공의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상황’의 문제는 여론이나 ‘정치적 기회구조’의 역할과 관련된 것이었다.

비교연구의 시각에서만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각각의 운동들은 일반화의 논리로 포섭되기 힘든 고유한 내적 논리와 외적 환경의 결합 속에서 진행되며, 고유한 한계와 문제들에 직면한다. 예컨대,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이하 평택투쟁)에서 대추리 주민들은 마을지도자에게만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그리고 마을공동체의 보존을 위해 집단 이주, 즉 운동의 ‘실패’를 스스로 선택했다. 마찬가지로 강정마을 해군기지저지투쟁(이하 강정투쟁)을 이끌어 온 강정마을 주민들과 지킴이 활동가들에게 해군기지의 건설은 투쟁의 종결점이 아니라 새로운 투쟁의 시작점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요컨대 기존 사회운동론에서는 지역화된 사회운동의 고유한 동학, 그리고 그것의 성공과 실패 이후의 운동, 즉 ‘운동 이후의 운동’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

둘째, 이 글에서는 사회운동론과 커먼즈론의 접합이라는 시각에서 강정투쟁을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시각은 우선, 커먼즈(communs)와 커뮤니티(=공동체, community)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특정 지역(local)을 배경으로 한 사회운동은 그 지역의 역사문화에 뿌리내린 장소나 공간을 배경으로 진행되어 왔고, 거주와 삶의 공동성에 근거한 관계망을 통해 응집력을 확보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평택투쟁에서 ‘황새울 들녘’과 대추분교에 관한 공동의 기억, 감각, 실천은 운동을 확장하고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강정투쟁에서는 평화운동의 가치와 이념을 정립하는데 ‘구럼비 바위’<sup>2)</sup>에 관한 공동의 기억, 감각, 실천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커먼즈(communs)는 마을의 근린에 존재하면서 생계와 생존의 자원이 되어왔던 공동자원을 포함하여 거주공동체의 역사문화적 장을 형성해 왔다. 평택이나 강정의 사례에서는 국가에 의해 강제로 징발될 운명에 처했던 커먼즈를 지키기 위해 그와 관련한 다양한 실천이 전개되었고, 그것이 파괴된 뒤에도 공동의 기억을 소환하고 공동의 감각을 유지하는 형태로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실천과 감각의 범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커먼즈는 지역화된 사회운동에서 생태환경적 가치,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의 의미를 부각시키는데 상징적인 구심의 역할을 담당해 왔고, 현재 운동의 정

2) 구럼비는 강정마을 해안에 있던 길이 1.2Km, 너비 250m에 이르는 거대한 용암바위를 가리킨다. 제주해군기지는 구럼비를 발파하고 그 자리 위에 세워졌다.

당성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의 재구성에서도 실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운동의 새로운 영역으로서 커먼즈운동(communs movement)의 동학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 실비아 페데리치는 커먼즈에 대한 좌파나 사회운동진영의 관심이 1993년 12월 31일의 사파티스타봉기 이후였다고 보고 있다. 국가주의적 혁명 모델의 쇠퇴와 신자유주의 하에서 진행되는 뉴인클로저(new enclosure) 속에서 파괴되는 자연과 삶의 영역에 대한 관심 속에서 커먼즈운동과 기존 사회운동이 결합되었다는 것이다.<sup>3)</sup> 페데리치는 자본의 세계화에 맞서서 생계와 생존의 공간과 재생산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투쟁 속에 커먼즈운동을 위치시키고 있다. 물론, 커먼즈운동이 이처럼 방어적이거나 저항적인 성격만을 띤 것은 아니다. 칸젤로시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나타난 도시정원(urban gardens)운동은 도시 내에서 커먼즈를 새롭게 형성하고 확장하려는 대표적인 운동이었다. 또한 2011년 이후에 전세계적으로 전개되었던 점령운동(occupy movement) 역시 커먼즈운동이라는 맥락에서 평가할 수 있다. 예컨대, 점령운동은 자발적인 참여구조, 수평적인 의사결정구조, 구성원의 포괄성(inclusiveness), 공동체 내외부에서 지원의 호혜적 성격 등 커먼즈운동과 동일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점령운동의 후기에는 명시적으로 커먼즈로서의 광장, 참여의 공동체적 성격이 강조되었다는 것이다.<sup>4)</sup> 한국에서도 최근에는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투기적 도시화에 저항하는 운동들의 분석 과정에서 커먼즈나 공유활동으로서 커머닝(commoning)의 역할을 강조하는 논의들이 등장하고 있다.<sup>5)</sup>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지역화된 사회운동’이 제기되는 배경과 그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의 구조변동이라는 시각에서,

- 
- 3) Federici, Silvia, “Feminism and the Politics of the Commons”, *The Commoner*, <http://www.commoner.org.uk/?p=113>. 2011; Caffentzis, George and Silvia Federici, “Commons Against and Beyond Capitalism”,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49, 2014, 92-105.
  - 4) Cangelosi, Elisabetta, “Commons: Practices of Spaces and Social Change”, *Comparative Law Review* 5(2), 2014.
  - 5) 한윤애, 「도시공유재의 인클로저와 테이크아웃드로잉의 반란적 공유 실천 운동」, 『공간과사회』 26(3), 2016; 홍덕화, 「전환적 사회혁신과 고령사회 대응」, 『경제와 사회』 117, 2018; 황진태, 「발전주의 도시에서 도시공유재 개념의 이론적·실천적 전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9(2), 2016.

즉 거주공동체의 투쟁공동체로의 전환과 투쟁공동체의 진화라는 측면에서 강정마을을 평화운동의 역사적 과정을 검토해 것이다. 여기에서는 공동체 경계의 재구성과 커먼즈의 역할이 논점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강정 투쟁의 양상이 제기하는 공동체 구성의 난점들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 II. 국책사업과 지역화된 사회운동의 동학

한국의 시민사회는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동원적 시민사회(mobilizing civil society)’의 성격을 띠었으나, 민주화 이후로는 점차 ‘제도적 시민사회(institutional civil society)’로 변모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sup>6)</sup> 민주주의로 이행 과정에서 권위주의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시민들을 거리로 동원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면, 민주화회의의 공고화 과정에서는 법과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요구를 대변하고 정권을 감시하는 형태로 시민사회(운동)의 역할이 재구성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생태계는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비롯한 군사사회운동은 조직력과 동원력의 퇴조 속에서 정치사회적 의제 형성 기능을 수행하는데 장애를 드러내고 있다. 환경운동, 여성운동, 성소수자운동 등 이른바 신사회운동은 상대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의제 형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나, 진보정당 운동의 정체, 보수적 시민사회운동의 성장과 반격 등으로 인해 각 영역마다 고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평화운동, 특히 군사기지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은 ‘제도적 시민사회’로의 진입이라는 평가와는 달리 ‘동원적 시민사회’ 시기의 특징들, 예컨대 공권력과의 충돌이나 대규모의 구속사태 등 전투적인 양상을 띠어 왔다. 이러한 특징은 이른바 ‘국책사업’<sup>7)</sup>의 구조변동에 의해 초래된 측면이 크다. 산업화 초

6) Im, Hyug Baeg, “South Korean Democratic Consolid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Consolidating Democracy in South Korea* edited by Larry Diamond and Byung-Kook Kim, Boulder,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 2000, 37.

7) 국책사업은 법률적으로 규정된 용어는 아니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대규모 공공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통상적으로 국책사업으로 부르거나(이춘희 외, 「국책사업 입지결정에 대한 갈등관

기인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과거의 국책사업들, 예컨대 경부고속도로건설사업(1968-1970), POSCO건설사업(1970-1973) 등은 주로 중앙정부에서 기획하고 실행한 사업이며, 동시에 중앙의 정치권과 언론이 중요한 반대세력으로 등장했었다. 그러나 민주화와 지방자치 이후에 시행된 국책사업의 사례들, 예컨대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1992-2014),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1992-2008), 시화호방조제 사업(1987-1994), 시화호간석지 개발사업(2002-2016), 새만금 개발사업(1991-2020),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1988-2006), 4대강 개발사업(2008-2012) 등에서는 갈등의 양상이 변화하게 된다. 과거처럼 중앙정부의 부처에서 기획하고 실행하며 중앙의 정치권이나 언론이 주요 행위자로 등장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측면이 있지만, 지역의 정치권과 지역 언론, 해당 국책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핵심적인 행위자로 등장했다는 점은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배경으로는, 대도시 중심의 산업화 이후에 국책사업의 장소로서 지방이 훨씬 중요해졌고, 국가 역시 대도시 시민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여러 시설들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했다는 점을 거론할 수 있다. 군사기지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한국전쟁 이후에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있던 군사기지 네트워크는 탈냉전, 2000년대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lobal Posture Review), 국방현대화계획에 따라 기존의 넓은 기지들을 일부 폐쇄하고 현대화된 새로운 군사기지를 늘리고 있다. 다른 한편, 민주화와 지방자치 흐름에 따라 대도시 지역에서는 대규모 군사기지에 대한 강력한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두 요인이 맞물려 용산 미군기지를 비롯한 대도시의 군사기지는 축소되거나 폐쇄되었고, 지역의 중소도시나 마을 단위에 새로운 군사기지가 건설되고 있는 것이다.<sup>8)</sup> 바로 이런 맥락에서 ‘지역화된 사회운동’은 시민사회의 전환이라는 구조적인 변화의 맥락에도 불구하고, 고유한 특징과 동학을 갖게 된다.

리 모형 구축 연구, 『국토계획』 42(6), 2007),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발전시설, 정보통신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이나 정부와 공공기관이 관장하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을 국책사업이라고 칭하고 있다(김선희, 「국책사업 갈등관리 사례분석」, 『국토』 283, 2005).

8) 정영신, 「동아시아 안보분업구조와 반기지운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2.

우선, 지역에서 벌어지는 국책사업과 지역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회운동은 각 지역의 구체적인 장소와 공간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그래서 장소와 연결된 사람들이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한다. 경찰이나 군대와 싸우는 시골의 ‘할매’들, 그들의 곁에서 예배를 드리는 종교인들, 지역의 마을을 지키기 위해 들어와 ‘사는’ 지킴이들, 마을을 오가는 도시의 시민들 등. 이들이 구성하는 지역의 현장들은 대도시 사회운동의 현장과는 상당히 다른 풍경을 보여준다.

국책사업 가운데, 특히 군사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사회운동들은 지배적인 담론구조 내에서 두 가지 장벽 혹은 압력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러한 담론구조는 실제로 정책의 형성과 실행 과정에서 효과를 발휘한다.<sup>9)</sup> 첫 번째 압력은 반대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외부세력’의 개입 없이 지역에 뿌리를 둔 ‘순수한 주민’들의 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요구받는다라는 점이다. 이때 ‘외부’는 지리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것으로, ‘종북세력’, ‘좌파’, ‘전문시위꾼’ 등과 호환할 수 있다. 해군기지반대투쟁 초기부터 주민들과 반대운동에 가해진 이러한 비판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구상권 청구소송을 2017년 말에 문재인 정부가 취하하기로 결정했을 때에도 반복되었다. 주류 언론들은 “이번 정부의 구상권 청구 철회 결정으로 혜택을 보게 된 개인 116명 중 마을 주민은 31명에 불과하다. 또 혜택을 보는 단체 5곳 중 마을 단체는 강정마을회 하나다. 나머지는 전국 단위의 외부 세력과, 국책 사업이 진행되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반대 활동을 하는 전문 시위꾼이다”라고 비판하거나, ‘불법시위에 면죄부’를 준 행위로서 ‘법치주의의 포기’라고 평가하고 있다.<sup>10)</sup> 이 같은 ‘외부세력’ 프레임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화된 사회운동의 모든 사례들에서 나타나며, 운동 주체들의 위치를 제한하는 중요한 압력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성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드배치반대운동의 초기 과정에서, 성

9) 정영신, 「국가와 군사기지에 대항하는 공동체의 투쟁: 성주의 반기지운동에 관한 시론」, 『창작과 비평』 176, 2017a.

10) 『조선일보』(2017.12.13.), 「‘불법시위꾼이 낼 돈’ 세금으로 메운다」; 「배상금 없애줬더니... 강정마을 시위꾼들 “사면도 해달라”」; 「[사설] 큰 걱정 던 제주기지 방해 전문 시위꾼들」; 『중앙일보』(2017.12.13.), 「[사설] 제주 해군기지 불법 시위에 면죄부... 법치주의 포기다」.



주군수를 비롯한 보수 인사들이 주도한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2016년 7월 20일 서울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면서 성주군민들에게 행정구역별로 이음표를 달고 집회에 참여하게 하여 ‘순수한 주민’임을 스스로 증명하고자 했다.

국책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지역화된 사회운동이 직면하는 두 번째 압력은, 사실상 첫 번째와 모순되는 것으로서, 이들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넘비 현상’이 아닐 것을 요구받는다. 예컨대, 2009년 해군기지 입지 결정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김태환 전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전개될 때 주류 언론들은 이에 대해 ‘안보 넘비’라며 비판했다.<sup>11)</sup> 이러한 압력의 배경에는 과거의 국책사업에서 주요 쟁점이 주로 ‘경제적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어 왔던 경험이 놓여 있으며, 그 밑바탕에는 국가의 사업에 대해 국민이 반대할 수 없다는 국가주의적 논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과거 국책사업의 진행과정상의 경험에 더하여, 국책사업 반대운동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들은 주민들의 반대운동을 더 많은 경제적 보상을 위한 ‘수단’으로, 이기적인 운동으로 파악해 왔다.

두 가지 담론구조 내에서 반대운동을 전개하는 주민들은 ‘외부세력’에 의해 오염되고 세뇌된 불온한 주체로서 ‘법치’의 틀 내에서 추방되어야 할 자들이거나, 국방사업이라는 공익 앞에서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적 주체로 나타난다. 전자가 장소에 결박된 특수주의적 주체에 대한 호명이라면, 후자는 탈장소적인 보편주의적 주체에 대한 호명이다. 이 속에서 지역과 장소에 연결된 주체이면서 보편적일 수 있는 주체의 가능성은 봉쇄된다. 다시 말해서 국방, 외교, 안보 등 국가 주도의 사업들에 관해 말할 수 있는 지역, 마을, 주민, 공동체의 권리는 부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담론의 장은 지배적 담론이 일방적으로 관철되기만 하는 공간이 아니다. 오히려 “동원의 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장”으로서 담론들 간의 쟁투가 일어나는 공간이며, 사회운동과 문화적 쟁투를 통해 대항적 담론이 창출되는 공간이다.<sup>12)</sup>

이 같은 ‘지역화된 사회운동’의 현상들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정책의 수

11) 『동아일보』(2009.09.22.), 「[사설] 제주 해군기지 무산시키려는 ‘안보 넘비’」.

12) Gamson, William A., “Political Discourse and Collective Action”, B. Klandermans, H. Kriesi and S. Tarrow(eds.), *From Structure to Action*, London and Greenwich: JAI Press, 1988.

립과 집행 과정에서 공공갈등관리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정책 순응(compliance)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모색해 왔다.<sup>13)</sup> 그리고 합법적이고 형식적인 절차적 정치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심의민주주의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sup>14)</sup> 즉, 파괴적 결과를 낳은 사회갈등을 둘러싸고 공공성 형성의 주체인 국가기구의 제도 개선 및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 사이의 소통과 담론의 장으로서 공론장의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가와 개인(들의 집합으로서 시민사회)의 구도 하에서 형성되는 정치적 공론장에서 국책사업의 현장이 되는 지역의 정치와 문화, 주체들의 의사가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sup>15)</sup>

### Ⅲ. 일상의 중단과 투쟁공동체의 형성

국책사업, 군사기지의 건설 결정은 일정한 역사문화적 유대의 망 속에 존재하는 지역사회에 ‘갑자기’ 주어진다. 동시에 이 지역사회의 주체들에게 공(公)적인 발화의 자리는 허락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초기부터 논의의 구도는 공적 질서를 대표하는 국가의 정책에 대한 단순한 ‘찬반’ 논의가 지배하며, 이에 따라 기존 공동체는 곧 바로 ‘우리’와 ‘그들’로 재편된다.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논란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그것이 강정마을의 문제가 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알려진 출발점은 1995년 국방부가 국방중기계획에 이를 반영하면서부터였다.<sup>16)</sup> 2002년에 해

13) 유종상, 『정책집행과 갈등관리: 주한미군 재배치를 중심으로』, 한국학술정보, 2009; 조성배,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5(2), 2015; 유규상, 「공공갈등사례 분석을 통한 선제적 갈등관리방안 연구 - 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갈등관리연구』 1(1), 2014.

14) 김창수, 「정책분쟁의 제도적 담론 분석 - 심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2(4), 2012.

15) 『프레시안』(2017.10.23.), 「‘공론화위’서 배제된 당사자는 울고 있다」.

16) 제주해군기지의 건설 과정과 강정투쟁, 강정마을 평화운동의 과정에 대해서는 강정마을

군은 화순항을 최적지로 선정하여 해양수산부에 부두 사용을 요청했으나, 해수부는 제주도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를 유보하였다. 그러나 2005년 3월 ‘제주해군기지 추진기획단’이 공식화되면서 논란은 재개되었고, 2005년 9월에 위미항으로의 변경 계획이 발표되면서 제주해군기지는 제주 남부의 여러 마을들의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2007년 3월 18일 위미1리 마을 임시총회에서 222명 중 180명이 해군기지 유치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위미리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로부터 한달 여 뒤인 4월 26일 저녁 7시 30분, 강정마을회 임시총회가 열렸다.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된 이 임시총회에서 소수 주민들은 10분간의 논의 끝에 ‘해군기지 유치’ 안건을 박수로 통과시켰다. 이후에 강정투쟁을 주도하는 강동군 전 마을회장은 당시 임시총회가 “해군기지가 화순이나 위미에 건설되는 문제에 대한 회의였는 줄” 알았다고 한다.<sup>17)</sup> 이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도 없었고, 공고엔 ‘해군기지 관계의 건’이라고만 공고되었다. 일주일간 공고해야 한다는 규약도 지켜지지 않았다.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이날 하루의 임시총회를 통해 별안간 강정마을의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찬반양론은 강정마을 공동체를 갈라놓았다.

강정마을 공동체는 어떻게 해서 ‘마음 지옥’이라 칭할 만큼 격렬하게 분열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위에서 밝힌 것처럼, 군사기지를 둘러싼 국책사업의 담론구조와 정책결정 구조로부터 설명할 수 있다. 국방, 외교, 안보에 관한 사항에서 국가는 유일한 발화의 주체였고 시민들, 특히 지역의 주민들은 늘 배제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 속에서 논의의 구도는 제3의 대안이나 타협보다는 찬반 의견으로 양분되어 왔으며, 이 같은 구도는 마을공동체 내부로 이식되고 재생산되었다.

둘째, 강정마을의 강한 공동체성은 역설적으로 격렬한 분열을 낳았다. 강정마을은 예로부터 제주의 다른 마을보다 부유한 마을이었다. 강정마을엔 “강정 애긴 곤밥(쌀밥) 주면 울고 조밥 주면 안 운다”는 속담이 있는데, 강정에 쌀이 흔해서 아이들이 쌀밥을 주면 오히려 운다는 뜻이다. 강정이 제주도 내에서 유일하게 논농사가 가능한 지역이었기에 가능한 속담이었다. ‘가내

회, 『제주해군기지반대 및 생명평화운동 중간자료집 I(2007~2017년)』, 강정마을회, 2018, 973-997쪽의 일지를 참조.

17) 『한겨레21』(2017.05.29.) 제1164호, 「국가가 파괴한 삶, ‘고통의 10년」.

또는 가래'로 불리다가 한자음 강정(江汀)으로 자리 잡은 마을 이름은 논농사가 가능한 '강가에 자리 잡은 마을' 혹은 '물 위에 떠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논농사를 통한 공동노동과 풍부한 물산은 마을의 화합을 위한 기반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친목계와 '갑장회' 등이 운영되었다. 하지만 마을공동체를 묶어 주던 다양하며 협력적인 공식·비공식 제도들은 어느 날부터인가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다. 한 주간지의 탐사 기사는 2007년 5월 기준으로 221개에 달하던 마을 모임 수가 2017년에는 150개로 줄어들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고<sup>18)</sup>, 그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다.

“완전한 파괴. 문헌 기록으로 보면 조선 세종 때부터 유지돼온 강정마을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원수 같은 이들이 부딪혀 사는 마을 지옥으로 변했다. 기지 유지 찬성 총회가 있고 4개월 뒤인 2007년 8월 20일, 해군기지 유지 마을총회에서 반대 의견은 94%에 달했다. 마을 전체 유권자 1천여 명 가운데 725명이 참여해 만든 결과였다. 10명 중 1명꼴이던 기지 찬성론자들은 철저히 고립됐다. 집안 어른이 돌아가셔도 마을에 알리지 못했다. 수십 명의 동년배끼리 꾸려가던 제주 특유의 '갑장회'가 와해됐고, 시골 마을의 사적 안전망으로 기능하던 친목계들이 깨져나갔다. 불신이 깊어 질수록 서로 다른 소속감을 인정받기 위해 내달렸다.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반대와 찬성으로 나뉜 주민들은 서로의 소속감을 확인하기 위해 더 맹렬하게 상대를 비난했다.”(강조는 인용자)<sup>19)</sup>

마을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정체성은 '역설적으로' 마을공동체 구성원의 자격을 둘러싼 논란과 분노로 이어졌다. '매향노'라는 단어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강정투쟁의 초기부터 주거와 삶의 공동체는 분열·해체되었다. 2007년 8월 20일에 진행된 강정마을 총회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해군기지 반대 입장이 결정되자, 이 총의를 기반으로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로서 '투쟁공동체'가 형성되었다. 강정마을 반기지운동의 주체를 '투쟁공동체'로 명명하는 것은 이 투쟁의 참여자들이 소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집합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ies)'을 형성해 가기 때문이다.<sup>20)</sup> 그리고 이

18) 『한겨레21』(2017.06.26.) 제1168호, 「세 마을 잔혹사, 마을이 깨졌다 국가가 나서라」.

19) 『한겨레21』(2017.05.29.) 제1164호, 「그때는 찬성했다, 그래서 지금은 슬프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찬성했던 88살 윤세민 '통한의 10년」.

집합적 정체성은 공동의 이해관심과 체험, 연대의 실현이라는 운동과정 속에서 구성된다. 그리고 시간과 정세에 따라 가변적인 집합적 정체성에 의해 투쟁공동체는 진화해 나간다.

강정마을 공동체는 이전부터 지속되던 생활과 생산의 공동성에 근거한 유대의식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으며, 국가권력과 군사기지에 대한 반대투쟁의 여러 활동을 통해 공동의 감각과 의식을 형성해 갔다. 그러나 투쟁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은 사회운동론에서 지적하는 공동의 감각이나 정체성에 그치지 않는다. 커먼즈론에 따르면, 그것은 우선적으로 공동의 활동(commoning)으로 나타나며, 활동의 결과는 공동의 공간, 장소, 상징 등 공동의 것(communs)을 생산하고 분배하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특히 지역화된 사회운동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공동활동이 나타난다. 첫째로, 참여자들은 투쟁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상황, 긴박성, 마을과 주민들의 생애사 등 현장성의 감각과 의식을 공유한다. 특히, 오늘날 이 같은 정보들은 SNS나 인터넷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되며, 따라서 현장성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둘째로, 참여자들은 해당 지역의 특정한 장소나 상징물의 가치를 공유한다. 강정투쟁의 초기부터 구럼비 바위는 그 생태적, 문화적 가치로 인해 투쟁공동체의 상징적 구심이 되어 왔다. 마지막으로 투쟁과 삶을 지속적으로 병행하는 과정에서 물질적 자원이나 네트워크의 공동생산, 공동노동, 공동분배를 실천한다. 강정마을의 투쟁공동체는 지역의 역사문화적 맥락 속에서 출현하며 또 그것을 원천으로 계속해서 진화하지만, 이전의 주거공동체보다 훨씬 개방적이며 민주적인 성격을 지닌다. 또한 그것은 사회운동조직

- 
- 20) 사회운동의 문화적 차원을 강조하는 논자들은 사회운동의 참여자들이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공동체에 대한 귀속감과 연대의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사회운동이라는 집합적 행동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테일러와 위티어는 집합적 정체성을 “구성원들의 공동의 이익, 체험, 연대로부터 도출되는 한 집단의 공유된 정의(shared definition)”로 규정하며, 멜루치는 “행동의 지향, 행동이 일어나는 기회와 제약의 장에 관해, 각 개인들(혹은 보다 복합적인 수준의 집단들)에 의해 생산되는 상호작용적이며 공유되는 정의”라고 규정한다. Taylor, Verta and Nancy E. Whittier, “Collective Identity in Social Movement Communities: Lesbian Feminist Mobilization”, A. D. Morris and C. McClurg Mueller(eds.), *Frontiers in Social Movement Theory*,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2, 105; Melucci, Alberto, *Challenging Cock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70.

(social movement organization)과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간헐적인 참여자와 심정적 동조자를 모두 포함하며, 명문화된 강령보다는 공동의 정체성에 의해 규정된다.

2007-2010년(강정투쟁 1기)까지 강정마을 주민들은 2007년 8월 20일에 열린 마을총회와 주민투표를 바탕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했다.<sup>21)</sup> 이 시기는 마을 주민들이 주거공간 안에서 형성되어 온 공동체적 관계를 투쟁공동체로 재구축하고 폭발적인 동원력을 발휘하던 시기였다. 조직적으로는 2007년 7월 3일 결성된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이하 제주범대위)와 강정마을대책위가 연대하던 시기였고, 내용적으로는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제주도정과 국방부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반대운동 기세를 꺾은 것은 제주의 지방정치와 사법기구들이었다.

제주범대위와 강정마을대책위는 해군기지 유치의 책임을 물어 김태환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벌였다. 2009년 6월 29일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주민소환서명부를 제출했고, 이어서 제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 투표청구 사실을 공표했다. 그러나 8월 26일 실시된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 투표는 투표율 11.0%에 그쳤고 주민소환은 무산되었다. 주민소환운동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전방위적인 압력과 위협, 그리고 주민소환투표의 낮은 투표율은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고립감을 확산시켰다. 뒤이어, 2009년 말, 제주도의회는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에 설정되어 있던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켜,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제도적 장벽을 제거해 주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강정동 해안 105,295㎡가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와 겹쳤다. 제주도는 절대보전지역 변경을 추진했고, 강정마을 주민들은 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농성을 하면

21) 이 글에서는 강정마을의 해군기지만대투쟁을 3기로 구분한다. 1기(2007-2010)는 해군기지 유치 및 반대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2007년부터 시작되었고, 이와 관련한 사법투쟁이 일단락되는 2010년까지의 시기이다. 2기(2011-2016)는 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착공이 이루어진 2011년부터 그것이 완성된 2016년까지의 시기로, 강정마을의 현장을 중심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물리적·정치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투쟁이 전개되던 시기였다. 3기는 해군기지가 완공된 2016년 초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로, 기지 건설 이후의 다양한 투쟁을 모색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서도 특별법상 지정된 절대보전지역을 기지 건설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곤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12월 17일에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고권일 강정마을대책위 위원장은 “절대보전지역 해제 이후 ‘반대운동’ 동력이 반토막 났다”고 회고한다.<sup>22)</sup>

강정마을 주민들은 2010년 1월 25일, 제주지법에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2월 15일에 내려진 1심 재판에서 무효확인 소송은 원고부적격으로 각하되었고,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되었다. ‘절대보전지역 해제’ 때문에 주민들의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되는 점이 없어 원고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다.<sup>23)</sup> 이 보다 앞서, 2009년 1월 21일 국방부 장관이 제주 해군기지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자, 4월 20일 강정마을 주민들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이 제기되는 도중인 2010년 3월 10일 국방부는 기지건설 변경계획의 승인을 고시했다. 2010년 7월 15일 서울 행정법원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국방부에 의한 당초의 실시계획승인 처분은 환경영향평가를 제출하지 않아서 무효이나, 변경된 실시계획승인 처분은 유효라고 판결했다.<sup>24)</sup> 이후에도 반대운동은 여러 소송을 제기했지만, 승리하지 못했다.

2009-2010년에 벌어진 일련의 지방정치의 결과는 제주의 주류사회가 해군기지 문제를 강정마을로 떠넘기면서 주민들을 정치적 장에서 배제했음을 보여준다. 강정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투쟁공동체는 민주주의의 문제와 “평화의 섬과 군사기지는 공존할 수 없다”는 프레임을 중심으로 범도민 차원으로 확장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동시에, 사법기구의 여러 판단들은 국가 공공행정상의 절차적 문제점들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고 당사자로서 주민들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이 시기에 투쟁공동체는 마을 및 마을과 연결된 제주와 ‘육지’의 시민사회운동 일부로 한정되었

22) 『한겨레21』(2017.05.29.) 제1164호, 「국가가 파괴한 삶, ‘고통의 10년」.

23) 대법원 상고는 기각되었다.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처분 무효확인 등 [대법원 2012.7.5, 선고, 2011두13187,13194, 판결],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67315>.

24)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등, [서울행법 2010.7.15, 선고, 2009구합 15258, 판결 : 항소],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6150>.

고, 해군기지를 둘러싼 권리주장은 국가의 공적 권력 내부로 제한되었다.

#### IV. 투쟁공동체의 진화와 경계의 재구성

강정투쟁은 2기(2011년~2016년)가 시작되는 2011년을 전후하여 또 한번의 전기를 맞게 된다. 2010년 11월 15일, 우근민 전 제주지사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수용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12월 15일에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절대보전지구 무효 확인소송을 법원이 각하한 일은 매우 상징적인 일이기도 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총의를 무시하고 배반한 지방정치와 사법기구의 잇따른 판결에 따라 주민 중심의 투쟁공동체는 축소되었고, 그 재편이 불가피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결정적으로, 1기의 사법투쟁이 실패함에 따라 2011년부터 해군이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착공하면서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한 물리적 충돌이 본격화 되었다. 고권일 당시 강정마을대책위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작년(=2010년, 인용자) 9월부터 11월까지 사람들이 아예 모이지 않았던 시기였다. 활동가는 전혀 없었고, 주민들의 참여도 적었다. 그 3개월간 1인 시위를 했는데, 그때는 정말 이렇게 끝나나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후 종환이 형님이 날마다 막걸리를 사들고 왔고, 경보도 결합했다. 막걸리팀이 만들어진 셈이다. 어르신들은 지나가다가 힘들지 않느냐고 막걸리를 사다주고, 술값도 내 주시고 했다. 그 과정을 겪으며 조금씩 힘을 얻었다.”<sup>25)</sup>

해군기지 ‘건설’이라는 객관적 조건과 투쟁공동체의 주체적 조건으로 인해 투쟁공동체의 재편, 즉 ‘우리’와 ‘그들’ 사이의 경계의 재편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투쟁공동체의 경계를 확장하여 이른바 ‘외부세력’을 받아들인 것은, 주류 언론의 판단처럼 ‘전문시위꾼’의 무단 개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강정마을대책위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25) 『참세상』(2011.09.25.), 「“제주해군기지, 이제 현장 제압할 것” [인터뷰]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만대 대책위원장.」.



“동력이 없는 상황에서, 남은 방법은 강정마을에 활동가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라 생각했다. 최\*\* 씨가 강정마을 사태를 밤새 번역해 외국에 알리고, 나와 함께 3개월 간 일인시위를 하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에도 연대를 요청했다. 다행히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작년 말부터 강정마을 문제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당시 마을 주민들은 외부세력을 끌어들이는다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었다. 올해(=2011년, 인용자) 초 1월, 개척자들이 방문했고 2월에는 생명평화결사대가 강정에 왔다. 우리 측에서 100일 순례를 강정에서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나서 3월 1일, 생명평화결사대가 우리 마을에서 100일 순례를 진행했다. 개척자도 3월에 다시 들어왔다. 평통사는 4월부터 상주를 시작하고, 끝까지 같이 가겠다고 말했다. 전국 단체 결집에 있어 자살한 실무 전담팀이 필요해 평통사가 총대를 댔다. 4월에는 문정현 신부님께 연락을 드렸다. 문 신부님께서 자신은 지는 싸움밖에 해 본적이 없다고 극구 사양했다. 전화를 끊고 난 다음, 많이 우셨다고 하더라.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쉬어도 되겠느냐며 고민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문 신부님께서 7월에 내려오셨다. 그때 정말 감동스러웠고,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한 순간 순간이 다 고비였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절들을 건너온 것 같다.”(강조는 인용자)<sup>26)</sup>

위 인용문에서 드러난 것처럼, ‘외부세력’의 ‘초대’가 처음부터 마을 주민들 다수의 지지를 얻었던 것은 아니었고, 이후에도 ‘외부세력’의 존재는 민감한 정치적 문제가 되었다. 사실, ‘외부세력’의 ‘개입’은 제주범대위를 통해서 투쟁의 초기부터 존재했었다. 또한 2007년 6월 26일, “제주 해군기지건설 ‘백지화’ 촉구 전국 41개 단체 공동기자회견”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들 대부분이 이름을 올렸다. 2011년 이후의 국면에서 중요한 변화는 공동체의 거주 구역으로 기지 확장을 위한 여러 시설과 인력이 침범해 들어오고 여러 곳에서 공사가 강행됨에 따라, 현장의 지키며 ‘주민들과 함께 사는’ ‘외부세력’의 존재가 중요해졌다는 점이다. 평택투쟁, 성주투쟁, 강정투쟁의 경우에, 투쟁공동체의 재편 과정에서 공동체의 경계를 허물고 확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두 집단이 존재한다.

먼저, 성주투쟁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종교인 혹은 종교집단은 투쟁공동체의 진화 과정에서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sup>27)</sup> 첫째, 종교인들

26) 『참세상』(2011.09.25.), “제주해군기지, 이제 현장 제압할 것” [인터뷰]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 대책위원장.

27) 조성윤·김선필, 「성주 소성리의 사드배치반대운동과 원불교의 미래, 『종교연구』 77(3), 2017.

은 반대운동의 의례화(ritualization)를 통해 투쟁에 필요한 사상적 자원으로써 평화의 교리를 설파하며,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항의행동을 경찰의 공권력 행사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성주투쟁에서 원불교가 담당했던 역할을 강정투쟁에서는 천주교가 담당했다. 사실, 강정투쟁에서 천주교는 2007년 5월 6일 제주교구장이던 강우일 주교가 “평화의 섬 제주를 염원하며”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발표하면서부터 본격화 되었다. 곧 이어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초기부터 강우일 주교는 천주교회의 교리 가운데 사회교리(예수의 가르침에 비추어 사회문제를 해석할 수 있도록 설명해 놓은 교리)를 전면에 내세웠고, 이후 천주교회 구성원들은 사회교리를 활용하여 반대운동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sup>28)</sup> 또한 공사현장 입구에서 진행된 생명평화미사는 주민들과 지킴이들이 쉬고 보호받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했다. 둘째, 종교인과 종교단체는 지지자들과 자금을 현장으로 동원하는 창구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천주교는 2011년 10월 10일, 서울대교구와 제주교구 등 15개 교구의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20여 천주교 단체들이 모여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이하 천주교연대)를 출범시킴으로써, 천주교 조직을 통해 투쟁공동체의 재편에 참여했다. 요컨대, 1기의 운동과정에서 제주사회와 제주의 지방정치가 해군기지 문제를 강정마을로 한정하여 스스로 ‘외부세력’이 되고자 했다면, 천주교 제주교구는 자신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이를 돌파하고자 했고, 2기에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투쟁공동체를 전국화 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두 번째 집단은 ‘지킴이’로 불리는 활동가들이다. 지킴이의 존재와 그 역할에 관한 학술적인 논의는 아직 본격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또 지킴이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가(혹은 “내가 지킴이인가?”)에 대해, 지킴이들 내부에서도 어떤 합의가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 글에서는 지킴이들에 대해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바라본다. 우선, 지킴이라는 존재는 운동의 ‘동원’ 국면에서 투쟁공동체의 중요한 성원으로 등장한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운

28) 김선필, 「천주교회의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2007~2017) - 종교사회학적 관점」, 『종교문화연구』 29, 2017. 김선필의 연구에 따르면, 이 같은 사회교리의 강조는 천주교회 내에서 사회참여를 둘러싼 논란을 일으켰다.

동 이전의 일상 속에서는 발견되지 않던 사람들이다. 둘째, 일회적인 방문자나 지지자들과 달리, 지킴이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현장을 지키면서 주민들과 함께 투쟁하며 함께 생활하는 존재다. ‘함께 사는’ 존재라는 것은 주민과 지킴이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지킴이들 내부 관계에서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주민들과 더불어 공동생산, 공동노동, 공동분배를 실천하는 주체들이다. 셋째, 지킴이라는 존재는 몇 가지 지표들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범주라기보다는, 운동의 현장성에 의해 재구성되는 임시적이며 가변적인 정치적 주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 진행되는 투쟁과 생활의 조합 양상은 늘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누가 지킴이인가?’를 질문하는 것은 매우 정치적인 행위이며, 그에 대한 답변 역시 마찬가지다. 오히려, 이와 같은 ‘모호성’이 지킴이라는 존재의 규정에서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킴이’라는 표상은 ‘외부인’을 가리키기도 하며, 지역에서의 거주와 생활이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주민되기’를 실천하는 이들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경계 위에 선 이들도, 동시에 경계를 교란하는 이들도이다. 이들의 존재는 세 가지 측면에서 투쟁공동체의 재편과 진화에서 매우 중요하다. 첫째, 주민(강정마을대책위)가 지킴이라는 존재를 수용하는 것은 투쟁공동체가 이른바 ‘외부세력’과의 ‘연대’를 넘어서, 그것을 포함하는 형태로 재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조직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일회적으로 연대하는 세력들과 달리, 지킴이들과의 공존은 현장을 둘러싼 일상의 공간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지킴이들은 일상의 생활방식, 이념, 가치관 등에서 상호 침투와 변화, 접합과 혼종, 충돌과 갈등을 일으킨다. 둘째, 현장을 방문하는 외부의 지지자나 연대세력의 구성원들은 스스로를 지킴이로 호명함으로써 손쉽게 투쟁공동체의 일원으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고 공동의 감각을 습득하게 된다. 또한 기존 지킴이들의 존재는 방문자들이 짧은 기간이나마 지킴이로서 거주하고 투쟁하는데 있어서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발휘한다. 셋째, 지킴이들은 자신들이 지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작가나 미술가들을 초청하여 반기투쟁을 예술활동과 결합시키기도 하며, 외국어능력을 활용하여 초국적인 지지망(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을 형성하고 확대하는데 기여한다. 예컨대, 강정마을 지킴이 활동가들은 매월 *Gangjeong Village Story*라는 영문판 뉴스레

터를 발간하여, 강정마을의 소식을 전 세계로 발신하고 있다.

재편된 투쟁공동체 운동의 전형적인 방식은 현장 밖의 시민들의 직접 ‘초대’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2011년 9월 3일, 10월 29일, 12월 3일, 2012년 3월 17일 진행된 ‘평화비행기’는 ‘희망버스’를 모델로 한 것이었는데, 서울을 비롯한 각지의 시민들이 비행기를 타고 강정마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었고 첫 행사에는 2천 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2012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역시 현장 밖의 시민들을 직접 ‘초대’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은 7월 말에서 8월 초의 약 1주일 동안 강정마을에서 출발하여 제주의 해안마을을 도보로 순례하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은 스스로를 지킴이로 호명하며, 그럼으로써 투쟁공동체의 구성원임을 표현한다.

강정투쟁 2기에 투쟁공동체는 지역적이면서도 초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였고, ‘외부’와 융합하는 형태로 진화하였다. 종교단체와 지킴이 집단은 한편으로 현장을 지키면서 기지의 건설에 물리적으로 저항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다른 한편으로 자신들이 보유한 전국적 혹은 초국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체험을 발신함으로써 투쟁공동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 V. 커먼즈운동의 전개와 ‘커먼즈 없는 커머닝’

투쟁공동체의 구성원들, 특히 강정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지킴이들의 일상은 반대투쟁과 연계된 공동의 생활과 행동으로 연결되어 있다. 지역화된 사회운동에서 투쟁공동체의 투쟁과 생활이 지닌 공동체적 성격을 이해하는데 커먼즈와 커머닝의 개념이 유용하다. 커먼즈(communs)는 근대 이전부터 민중들이 생계와 생존을 위해서 함께 이용하고 함께 관리하던 다양한 자연 자원(마을숲, 마을공동목장, 마을우물, 마을어장, 마을산 등)을 지칭하는데, 현대사회에서도 마을광장, 마을거리, 마을도서관, 공동육아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로 생산·재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을 비롯한 주류의 커먼즈 연구들은 기존 커먼즈를 유지해 온 제도들에 관심의 초점을 두었고, 커먼즈의 새로운

형성 문제나 재생산과의 관련성에는 관심을 덜 두었다. 오스트롬을 중심으로 한 주류의 커먼즈론은 경제학에 기반을 둔 집합행동 이론과 인류학에서부터 발전해 온 사례 연구를 종합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오스트롬의 논의에서 커먼즈는 인간의 이용을 기다리는 객체화된 자원으로만 나타나며, 공동체 역시 합리적인 자원이용자 집단으로 등장한다. 이에 반해, 앞에서 언급한 페테리치는 커먼즈를 인간의 삶과 분리될 수 없는 삶의 공간, 생활양식으로 이해하며, 피터 라인보우는 활동(communing)을 중심으로 커먼즈를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sup>29)</sup> 커먼즈의 형성이 사회운동과 결합되는 양상에 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주류의 커먼즈론에 비해, 이들의 논의는 사회운동과 결합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현대사회의 핵심 제도들인 국가와 시장은 공사(公私) 이분법의 논리에 의해 사회를 조직하며, 기본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커먼즈에 적대적이다. 새로운 커먼즈의 창출은 국가기구나 자본주의적 기업과 결합된 상태로 출현하기도 하지만, 현대사회의 새로운 인클로저(new enclosure)에 저항하고 새로운 삶의 양식이나 생산양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운동과 결합되지 않을 수 없다.<sup>30)</sup> 다른 한편, ‘지역화된 사회운동’은 지역(local)의 특정한 장소나 공간을 배경으로 진행되며, 운동의 현장에 존재하는 장소나 공간이 지닌 역사문화적 맥락이나 상징적인 가치를 중요한 자원으로 삼아 전개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때 지역사회에 뿌리내린(embedded) 상징적인 장소나 공간으로서 공동성의 형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매개물이 되거나 공동의 활동을 통해 생산되고 분배되는 결과물이 바로 커먼즈라고 할 수 있

29) Ostrom, Elinor,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Understanding Institutional Divers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피터 라인보우, 『마그나카르타 선언: 모두를 위한 자유권들과 커먼즈』, 갈무리, 2012. 커먼즈에 관한 개념, 이론 및 쟁점에 관해서는 정영신, 「엘리너 오스트롬의 공동자원론을 넘어서: 자원관리 패러다임에서 커먼즈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접근으로」, 『공동자원의 섬 제주1 - 땅, 물, 바람』, 진인진, 2016을 참조.

30) 사회변동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서 커먼즈론과 커먼즈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영신, 「커먼즈의 변동과 한국사회의 이해」, 최현·정영신·윤여일 편저, 『공동자원론, 오늘의 한국사회를 묻다』, 진인진, 2017b; Jeong, Young Sin, “From Decommonisation to Re-commonisation: A Conceptual Approach to the Study of Social Change Based on the Theory of the Commons”, *Development and Society* 47(2)를 참조.

다. 따라서 커먼즈론과 사회운동론은 사회운동의 과정에서 커먼즈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커먼즈를 형성·재형성하는 실천으로서 커머닝(commoning)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결합될 여지를 지니고 있다.

강정투쟁의 상징적 존재인 구럼비는 전형적인 커먼즈였다. 강정투쟁의 초기부터 ‘구럼비를 지키자’는 구호 아래 구럼비가 지닌 생태적 가치들이 강조되었다. 구럼비가 지닌 생태적 가치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부지인 구럼비 바위 인근에는 붉은발말뚝게(멸종위기종 2급), 멍꽂이(멸종위기종 2급), 새뱅이(멸종위기종 후보종), 남방큰돌고래(세계자연보전연맹 멸종위기종) 등 각종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다. 해군기지 부지인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인근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29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정한 절대보전지역이며, 그 앞바다는 천연기념물 442호 연산호 군락지이다. 해군기지 부지에서 2.3Km 떨어진 범섬은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인 동시에 천연기념물 421호로 지정되어 있다.”<sup>31)</sup>

강정투쟁 1기에 구럼비를 말하는 언어는 주로 위와 같이 구럼비가 지닌 환경적, 생태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멸종위기종’, ‘절대보전지역’, ‘생물권보전지역’과 같은 환경운동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이것은 1기의 투쟁이 절차적 민주성과 사법투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강정투쟁 2기에는 그 강조점이 이동하는데, 특히 구럼비 바위가 발파된 2012년 3월 이후에는 주민들의 기억을 주민들의 언어로 발화하는 형식을 띠었다.

“지금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구럼비 바닷가는 저의 어릴 적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가끔 해군기지 일로 해서 강정천 하구에 있는 멧부리 바닷가에 가곤 합니다. 그곳에 가서 공사장 출입을 막기 위해 높다랗게 설치한 철책을 보면 가슴이 이 먹먹합니다. 체한 것같이 가슴이 답답합니다. 폭파하고 콘크리트로 덮어 해군기지를 만드는 구럼비 바닷가는 저와 친구들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특별한 공간입니다.”<sup>32)</sup>

31) 참여연대, 『제주해군기지사업 쟁점과 진실』, 『참여연대 대선정책 이슈리포트』 제2012-17호, 2012, 6쪽.

32) 강정마을회 엮음, 『눈물 속에서 자라난 평화: 4·3 이픔 딛고 생명평화마을 된 강정 이

그러나 주민들이 공유했던 역사, 문화, 생활의 장으로서 커먼즈, 즉 구럼비에 관한 기억과 의미는 자연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이야기와 실천 속에서 계속해서 재구성된 것이다.

“아! 구럼비. 다시 강정에 오지 않았다면 그곳을 어떻게 알았을까. 정성껏 치성드릴 때면 떠갔다는 할망물, 물이 깊은 냇길이소도 이제야 알았다. 어린 시절, 백중날 되면 할머니가 맘 먹고 주신 천 원으로 과자 사고, 구럼비에서 물토종게를 잡았고, 구럼비 용천수 바위 안에서 수영을 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구럼비 바위에 짝 옆드리면 뽕송뽕송 기가 전해졌던가. 몰랐지만 좋았다. 추우니까 따뜻한 돌이 좋았다. ... 강정에 다시 오지 않았다면, 그런 모든 것을 어떻게 알았으랴. 어르신들한테 들었던 유산기가 있을 때 먹으면 괜찮다 하던 그 새뱅이 새우가 할망물에 사는 줄 어떻게 알았으며, 어머니가 잡지 말라던 뽕쟁이, 그 붉은발말뚝게가 그리 귀한 존재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 아름답던 기억의 구럼비에서 기운을 얻던 시절이 평화이고 행복이었음은 또 어떻게 알았을까.”<sup>33)</sup>

구럼비 바위는 “주민들에게 오랫동안 동네마당으로서, 사랑방으로서, 놀이터로서, 쉼터로서, 성소로서, 그렇게 문화를 빚어낸 공간이었다.” 구럼비의 상실로 잃게 된 ‘우리 바당’ 역시 “삶터이자 쉼터, 놀이터이며, 의례의 장이자 기억의 공간”이었다.<sup>34)</sup> 구럼비와 ‘우리 바당’은 전형적인 생계자급 커먼즈(subsistence commons)였던 것이다. 강정투쟁 1기와 2기 초의 투쟁이 커먼즈로서 구럼비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면, 2기와 3기(2016년~현재까지)의 투쟁은 상실된 커먼즈에 관한 기억을 말하고 공유함으로써 구럼비를 상징적으로 소환하는 투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의 언어로 이야기된 구럼비는 다시 지킴이와 활동가들에 의해 이야기되고, 투쟁공동체 공동의 언어로 확장된다. 이러한 일련의 실천을 ‘커먼즈 없는 커먼닝(communing without commons)’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육지 사람으로 아주 짧은 순간을 구럼비에서 보냈을 따름이다. 아주 특별한 추억이 있다거나 한 것은 아니다. 맨발로 구럼비에서 서서 범섬을 바라보았을 뿐

이야기』, 단비, 2012, 13쪽.

33) 강정마을회 엮음, 『눈물 속에서 자라난 평화: 4·3 이픔 딛고 생명평화마을 된 강정 이야기』, 단비, 2012, 70-71쪽.

34) 윤여일, 「강정마을에 대한 세 가지 시선」, 『ECO』 21(1), 2017, 77쪽.

이다. 나에게 구럼비는 강정 삼촌들의 눈에 번지던 웃음과 눈물, 제주를 터전으로 가꾸고 지키고자 했던 제주 도민들의 굳건한 의지, 구럼비를 만나 삶의 터전을 옮겨온 동료들의 추억이 쌓이고 쌓인 것이다. 비록 구럼비를 잃었다 하더라도 잊을 수 없는 이유는 아직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이다.”<sup>35)</sup>

강정투쟁 2기의 활동 과정에서 지킴이들과 강정마을대책위 활동가들, 주민들은 구럼비를 중심으로 투쟁공동체의 일상을 재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매일 아침 7시에 ‘생명평화백배’로 하루를 열고, 11시에는 길거리에 있는 미사 천막에서 ‘생명평화미사’를 드리며, 12시에는 노래와 춤, 시와 구호가 있는 ‘인간띠잇기’를 이어갔다. 또한 반대운동의 거점인 ‘강정 평화센터’를 중심으로 ‘평화책방’, 게스트하우스, 할망물 식당, 강정평화상단, 컨테이너 하우스와 같은 공간들이 구성되었다. 특히 2014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강정평화상단은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지지하는 주민들의 농·축·수산물과 여러 가 공품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강정투쟁을 후원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뿐만 아니라, 공동생산과 공동노동을 통해 주민들과의 공동성을 형성하는 것이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

## VI. 일상의 회복과 공동체 재구성의 난점들

강정투쟁 3기(2016년~현재까지)의 투쟁은 시간과 공간을 둘러싸고, 공동체와 일상의 의미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다. 투쟁공동체는 삶의 장소에서 벌어지는 투쟁, 삶과 투쟁의 공존, 그리고 행위자들 사이의 공동의 행동, 감각, 실천을 영역을 이론화하기 위한 개념이며, 그 전제는 일상으로부터의 단절 및 일상과는 다른 시공간 감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일상으로부터의 단절 상태를 ‘전장(戰場)’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지 비유적인 것이 아니다. 2006년 5월 4일 새벽, 정부가 평택 대추리 들관과 대추분교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위해 경찰 110개 중대 1만 1,500명, 수도군단 및 700 특공연대 소속 2개 연대 2,800여 명, 용역업체 직원 600명을 동원하여 주민들

35) 「“우리의 기억이 구럼비가 되어”, 『제주투데이』(2018.05.01.).

<http://m.ijeju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355>.



과 시위대를 진압했던 이른바 ‘여명의 황새울’ 작전. 그것의 시공간 감각을 ‘전장’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에 무리는 없다고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2012년 3월 7일 오전 11시 20분, 강정마을에서 구럼비 발파를 막기 위해 철조망과 펜스를 넘어서 혹은 카약을 타고 바다 위에서 저항하던 강정마을의 주민들과 지킴이들이 제압되고 연행되던 시공간의 감각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현장성의 감각은 투쟁공동체를 변별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투쟁’공동체는 운동의 ‘탈동원’ 국면에서 운동의 열기와 동원력이 감소함에 따라 서서히 쇠퇴하고 소멸하게 될 것이다.<sup>36)</sup> 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전장’에서 ‘일상’으로의 전환, 혹은 일상의 공동체나 주거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할 것인가?

“군게 닫혀 구럼비 해안을 막았던 펜스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무너진 펜스 뒤 보이는 해군기지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겐 생소한 광경이었겠죠.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아름다운 구럼비 해안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마을 사람들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당시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요.”<sup>37)</sup>

해군기지의 완공은 다시 한 번 충격으로, 그리고 시공간을 둘러싼 압력과 투쟁으로 다가온다. ‘공동체회복사업’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각종 토목사업으로 인해 마을길은 넓어졌지만, 주민들과 지킴이들이 공유하던 마을의 공터나 마을회관 안의 숙소는 사라지고 있다. 투쟁공동체의 시간을 구성했던 활동들에 대한 견제나 비판도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해군기지 앞에서 매일 12시에 진행되고 있는 인간띠잇기 행사는 해군기지 찬성 주민들에게 ‘일상의 평온을 깨는’ ‘소음’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10년 전으로 복귀하는 형태의 일상은 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이들의 존재는 일상으로의 복귀의 불가능성을

36) 2015년 10월 12일, 천주교연대 출범 4주년을 기념하는 생명평화미사는 투쟁공동체의 해체를 예감하는 중요한 집회였다. 이를 기점으로 제주교구와 천주교연대는 미사를 중단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12월 1일 제주해군기지에서 기지전대의 창설식이 거행되었고, 2016년 2월 26일에는 제주해군기지 준공식이 거행되었다. 2015년 9월 5일 거행된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 개관식은 이러한 국면을 예감한 반대운동 진영의 상징적인 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7) 『미디어제주』(2018.04.29.), “‘해군기지는 완공되었는데, 강정은 왜 투쟁하나?’”.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해군기지의 건설과 더불어, 일상은 전장과 결합된 보다 복잡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아이들 학교 앞으로 덤프와 굴삭기가 줄지어 드나든다. 마을 큰 사거리엔 정신이 하나도 없다. 전에 없던 높은 건물이 계속 올라선다. 해군기지를 찬성했던 집들은 태극기를 내걸기에 이르렀고 삼촌들 작업복은 국방색 위장무늬가 한창 유행이다. 짧은 머리의 청년들이 무리지어 걸어다니면 피하게 된다. 낫선 차량이 들어왔다가 나갔는데 어떤 삼촌네 땅을 보고 갔다는 말이 돈다. 마을 안에서 가장 넓고 아름답던 굴밭은 이들 사이에 자취를 감췄다. 이따금 강정교에 걸어든 노란 깃발을 젊은 남자들이 뽑아버리기도 한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군가가 온 마을에 울린다. 처음엔 창문을 거세게 닫던 사람들도 이젠 포기하고 듣는다. 모르는 사이 가사를 따라 부른다.<sup>38)</sup>

강정마을에서 카메라를 들고 매일같이 강정의 일상을 기록하는 한 지킴이가 쓴 강정의 하루다. 군사기지는 구럼비 바위 위에 건설된 아스팔트 도로와 빌딩, 끈게 뺀 군항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동네를 산책하는 짧은 머리의 젊은 남자들이며, 때마다 흘러나오는 군가의 노랫가락이며, 차츰 물러드는 유흥가의 내온사인이며, 목돈을 만질 수 있는 흔하지 않은 기회이기도 하다. 해군기지가 건설된 후의 일상은 이전의 일상이 주던 평온함으로 특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낯선 것들과의 갑작스런 만남이나 충돌, 오래된 것들의 갑작스런 상실로 다가온다. 그래서 일상의 공동체로의 복귀라는 의미에서 ‘공동체의 회복’은 불가능하다. 또한 분열되고 파괴된 공동체의 원상 회복 역시 불가능하다.

강정마을회와 <한겨레21>이 2017년 5-6월에 강정마을 주민 1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중,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적어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해군은 강정마을 주민공동체 파괴 주범이고 현재도 진행 중이니, 월 1회 해녀와 찬성하는 사람들을 계속 해군기지로 초대하여 많은 대접과 선물 공세를 하고 있다.”(80대 남성, 농어업)

“이왕에 들어왔으니 막지도 못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차별대우 절대 하지 마. 찬

38) 엄문희,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말과말』 2017년 봄호, 2017, 360쪽.

성하는 사람들 병원 데려가고 해군병원 오라고 하는 것.”(80대 여성, 농어업)

위의 지킴이의 인용문이나 마을 주민들의 답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공동체 회복의 불가능성은 무엇보다 군사기지 자체가 살아있는 생물처럼 공동체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고 동시에 기지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공동체를 구성해 낸다는 점에 있다. 그것은 ‘군민화합’, ‘마을복지’, ‘마을발전’, ‘공동체회복사업’ 등의 이름으로 진행된다. 동시에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투쟁공동체 구축의 상징적인 구심이었던 구림비를 소환하고 그것을 통해 공동성을 형성하는 일상의 생활과 투쟁을 전개해 나간다. 2개 아니 그 이상의 공동체들이 지속적으로 형성·재형성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나 제주도의 ‘공동체회복사업’은 해군기지 건설 이후의 공동체의 다수성을 간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필자는 공동체의 다수성을 인정하는 지방정치, 마을정치를 통해 해군기지를 둘러싼 문제와 삶의 회복을 위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강정마을 주민들은 지난 2018년 3월 30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국제관함식에 대한 마을회 입장 관련 의견’을 논의하고, ‘반대’의견으로 뜻을 모았다.<sup>39)</sup> 국제관함식이란 국가 통수권자가 병력을 과시하기 위해 해상에서 군함을 사열하는 행사로, 한국 정부는 1998년, 2008년, 2015년에 관함식을 개최했고, 이 행사에 20여 개국을 초청한 바 있다. 2018년에는 69개국, 함정 30여 척을 초청하여 “전 세계 해군이 한반도에 결집하여 화합과 세계평화 기원”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번 임시총회에는 마을 주민 80여 명이 참석했고, 그 가운데 50여 명이 반대 의견을 표실했다. 이번 회의는 바뀐 리더십을 배경으로, 해군기지와 마을의 관계 설정을 가늠하는 잣대로 평가되었다. 마을총투표와 같은 형식은 아니었으나, 해군기지에 관해 다양한 입장을 지닌 주민들이 모여서 민주적이며 공개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성사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회의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해군은 다시 한번 마을 주민들의 총의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강정 마을회와 <한겨레21>이 진행한 위의 설문조사에는 “마을에 중요한 일이

39) 『제주의소리』(2018.04.02.), 「국제관함식 강정마을 ‘반대’ 제주 대신 부산 개최 유력」.

생겼을 때 강정마을회가 주최하는 주민투표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101명 가운데 77명이 ‘있다’고 대답했다.<sup>40)</sup> 민주적인 토론과 의사표명을 통해 강정마을 공동체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마을 주민들은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투쟁공동체는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그 해체와 새로운 공동체의 재구성은 가능한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로서 ‘구럼비’가 지니는 상징적 의미와 그 재현의 문제를 거론해 볼 수 있다. 강정마을 활동가들이 대만, 오키나와의 평화운동가들과 연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평화의 바다를 위한 섬들의 연대’는 2018년 평화캠프의 장소로 강정마을을 선택하고, “우리가 구럼비다!”를 구호로 내세웠다. 구럼비 발파를 저지하기 위해 2012년에도 사용되었던 이 구호는 매우 역설적이다. 구럼비 발파의 현장에서 이름을 묻는 경찰의 심문에 영국의 평화운동가인 엔지 젤터는 “내 이름은 구럼비”라고 대답했다. 원래 “나는 구럼비다”라는 구호는 내 삶이 파괴될 수 없는 것처럼 구럼비 역시 파괴되어서는 안 되는 생명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구호였다.<sup>41)</sup> 역사와 문화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삶에 대한 인간의 권리와 존엄이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2012년의 구럼비 발파는 투쟁공동체가 구럼비에 부여했던 가치와 의미들의 부정이었다. 동시에 구럼비의 파괴와 조각남은 강정마을 공동체의 파괴와 조각남을 상징적·물리적으로 반복한 사건이었다. 2018년, 그것은 이제 ‘부재하는 어떤 것’, ‘박탈당한 생명과 존엄’에 스스로를 일치시키는 구호가 되었다. 부재하는 공동체의 회복 과정은 애착을 가진 대상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대상과 다시 관계 맺기를 시도하는 ‘애도’의 과정과 유사할 수 있다. 하지만 재구성될 공동체, 미래의 공동체가 과거의 커먼즈, 구럼비와 연결되어 있던 과거의 강정마을 공동체일 수는 없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되었다. 또한 공동체의 상징적 구심이었던 구럼비의 파괴자들, 해군 역시 마을 안에서 집단을 구성하며 거주하고 활동하면서 그들의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므로 ‘커먼즈 없는 커머닝’의 운동이 단순히 예전의 커먼즈와 공동체를 복구하는 것일 수는 없다. “우리가

40) 그 외에 ‘사안에 따라 다르다’(13명), ‘없다’(8명), 기타·무응답(3명) 등의 답변이 있었다.

41) 『제주의소리』(2012.03.29.), 『붉은 피로 물든 삼성물산 본사 앞 ‘나는 구럼비다’』.

구럼비다”라는 구호는 공동체를 훼손하고 그 위에 자리잡은 해군기지과 그들의 공동체에 저항하는 언어임과 동시에, 구럼비에 부여했던 상징적인 가치와 의미들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관계 맺기를 시도하는 담론적 실천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럼비의 소환은 ‘아름다운 과거’로의 회귀보다는 생명과 평화라는 가치를 이어가는 각 개인들이 형성하는 새로운 공동성과 공동체, 새로운 커먼즈들로 귀결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럼비다”라는 구호는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열린 구조의 내면화 방식일 수 있다.

## Ⅶ. 결론을 대신하여

제주해군기지의 건설에 반대했던 강정마을의 중심의 평화운동, 반기지운동은 제주해군기지의 완공과 더불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강정투쟁은 부안, 영덕, 화성의 매항리, 평택의 대추리·도두리, 밀양, 성주 등을 잇는 ‘지역화된 사회운동’의 흐름 속에 위치해 왔다. 지역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형성된 ‘투쟁공동체’는 기지 건설의 과정과 더불어 그 형태와 내용을 달리하면서 진화해 왔고, 지역 주민, 종교인, 지킴이 등이 중요한 주체로서 그 역할을 담당했다. 그 과정에서 구럼비를 비롯한 커먼즈는 운동의 상징적인 매개물로서, 주민들의 기억과 말하기를 통해 계속해서 재소환되고 있다. 이러한 ‘커먼즈 없는 커머닝(communs without commoning)’의 실천은 이야기의 축적을 통해 전승되고 전파되면서 새로운 공동성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곧 새로운 주체(성)의 탄생, 새로운 공동체들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장 이후의 일상’, 탈동원화 국면은 많은 공동체들의 다수성을 전제로 한다. 해군기지의 ‘대민봉사활동’과 중앙정부의 다양한 ‘공동체회복사업(=개발사업)’은 해군기지 찬성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상실된 것’, ‘상실된 구럼비’를 중심으로 투쟁공동체가 새로운 형태로 재구축되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은 공동체들이 마을을 구성해 가고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10년에 걸친 공동체의 분열이 없었던 것처럼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다수성을 전제로

한 마을정치, 지방정치를 재구성하는 기나긴 과정이다. ‘공(共)의 의지와 참여에 기반을 둔 정치’에의 요구에 공공(公共)의 의미를 독점해 온 국가, 지자체, 그리고 제주의 지역사회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 참 고 문 헌

-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반대 및 생명평화운동 중간자료집 I (2007~2017년)』, 강정마을회, 2018.
- 강정마을회 엮음, 『눈물 속에서 자라난 평화: 4·3 아픔 딛고 생명평화마을 된 강정 이야기』, 단비, 2012.
- 김선필, 「천주교회의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2007~2017) - 종교사회학적 관점」, 『종교문화연구』 29, 2017.
- 김선희, 「국책사업 갈등관리 사례분석」, 『국토』 283, 2005.
- 김창수, 「정책분쟁의 제도적 담론 분석 - 심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2(4), 2012.
- 김대연,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본 ‘불법이주반대운동’의 성공요인」, 『국제정치논총』 50(5), 2010.
- 라영재·김세진, 「사회운동이 정부정책 변화에 미치는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3.
- 라인보우, 피터, 『마그나카르타 선언: 모두를 위한 자유권들과 커먼즈』, 갈무리, 2012.
- 엄문희,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말과활』 2017년 봄호, 2017.
- 유규상, 「공공갈등사례 분석을 통한 선제적 갈등관리방안 연구 - 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갈등관리연구』 1(1), 2014.
- 유종상, 『정책집행과 갈등관리: 주한미군 재배치를 중심으로』, 한국학술정보, 2009.
- 윤여일, 「강정마을에 대한 세 가지 시선」, 『ECO』 21(1), 2017.
- 이춘희 외, 「국책사업 입지결정에 대한 갈등관리 모형 구축 연구」, 『국토계획』 42(6), 2007.
- 임희섭,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이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 정영신, 「동아시아 안보분업구조와 반기지운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2.
- \_\_\_\_\_, 「엘리너 오스트롬의 공동자원론을 넘어서: 자원관리 패러다임에서 커먼즈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접근으로」, 『공동자원의 섬 제주1 - 땅, 물, 바람』, 진인진, 2016.
- \_\_\_\_\_, 「국가와 군사기지에 대항하는 공동체의 투쟁: 성주의 반기지운동에 관한 시론」, 『창작과 비평』 176, 2017a.

- \_\_\_\_\_, 「커먼즈의 변동과 한국사회의 이해」, 『공동자원론, 오늘의 한국사회를 묻다』, 진인진, 2017b.
- 조성배,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5(2), 2015.
- 조성윤·김선필, 「성주 소성리의 사드배치반대운동과 원불교의 미래」, 『종교연구』 77(3), 2017.
- 참여연대, 「제주해군기지사업 쟁점과 진실」, 『참여연대 대선정책 이슈리포트』 제2012-17호, 2012.
- 한윤애, 「도시공유재의 인클로저와 테이크아웃드로잉의 반란적 공유 실천 운동」, 『공간과사회』 26(3), 2016.
- 홍덕화, 「전환적 사회혁신과 고령사회 대응」, 『경제와 사회』 117, 2018.
- 황진태, 「발전주의 도시에서 도시공유재 개념의 이론적·실천적 전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9(2), 2016.
- Caffentzis, George and Silvia Federici, “Commons Against and Beyond Capitalism”,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49: 92-105 2014.
- Cangelosi, Elisabetta, “Commons: Practices of Spaces and Social Change”, *Comparative Law Review* 5(2), 2014.
- Federici, Silvia, “Feminism and the Politics of the Commons”, *The Commoner*, 2011. <http://www.commoner.org.uk/?p=113>.
- Gamson, William A., “Political Discourse and Collective Action”, B. Klandermans, H. Kriesi and S. Tarrow(eds.), *From Structure to Action*, London and Greenwich: JAI Press, 1988.
- Im, Hyug Baeg, “South Korean Democratic Consolid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Consolidating Democracy in South Korea* edited by Larry Diamond and Byung-Kook Kim, Boulder,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 2000.
- Jeong, Young Sin, “From Decommunisation to Re-commonisation: A Conceptual Approach to the Study of Social Change Based on the Theory of the Commons”, *Development and Society* 47(2), 2018.
- Melucci, Alberto, *Challenging Cod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Ostrom, Elinor,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Ostrom, Elinor, *Understanding Institutional Divers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 Taylor, Verta and Nancy E. Whittier, "Collective Identity in Social Movement Communities: Lesbian Feminist Mobilization", A. D. Morris and C. McClurg Mueller(eds.), *Frontiers in Social Movement Theory*,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2.

## Abstract

Jeju Naval Base and the Change of Local  
Community in *Gangjeong* Village

Jeong, Young-Sin\*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anti-base movement of *Gangjeong* village which was developed around the Jeju naval base from two perspectives. First, large-scale national projects in Korean society have faced strong opposition movements of local residents since the 1990s. The overgrowth of metropolitan cities and resistance to hate facilities, the economic crisis in the provinces, and the excessive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re the backgrounds. In particular, these conflicts have repeatedly arisen in projects and struggles surrounding the construction of military bases in various parts of Korea. In this article, we define such a series of struggles and movements as 'localized social movements' and analyze the formation and the dynamics of the struggle community based on the communality formed at the local level. Second, the existence of commons is very important in the formation of localized social movements and struggle community. Like *Kumunbi* in *Gangjeong* village, these acquire a symbolic meaning in the course of the struggle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formation of a transnational network. In *Gangjeong* village, the practice of 'commoning without commons' has become the value orientation of the opposition movement after the blasting of *Kumunbi*. In other words, the members of the struggle

---

\* Research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community tried to expand and sustain themselves through the practice of recreating the images and values of *Kurumbi* as a symbolic commons and reproducing the historical and cultural narratives of *Kurumbi*. The evolution of the struggle community and the analysis of the social movement based on the Commons theory enables to analyze the dynamic aspect of the localized social movement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the commonness and the border problem of the struggle that was overlooked in the existing social movement theory.

Key Words : Jeju Naval Base, Gangjeong village, commons, commoning, struggle community

교신 : **정영신**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  
제주대학교 인문대학1호관 8221호  
(E-mail: freecity7@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8. 05. 10

심사완료일: 2018. 06. 02

게재확정일: 2018. 06. 07